

“봄엔 드럼, 가을엔 K-POP”… 서울을 글로벌 음악도시로

서울시 4대 음악 거점 선정
연내 ‘축제지원조례’ 제정
계절별 대표 음악축제 개최
5년간 4800억 투입 조성

케이팝부터, 클래식, 국악, 드럼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축제가 사계절 내 서울에서 열린다. 노들섬 복합문화 공간을 시작으로 서울의 음악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4대 음악거점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1년 365일 서울 곳곳에서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오는 2023년까지 총 4818억원을 투입한다.

봄에는 드럼, 여름에는 국악, 가을에는 K-POP, 겨울에는 클래식 등 계절별 대표 음악축제가 펼쳐진다. 우선 시는 이달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K팝 축제인 ‘2019 서울뮤직페스티벌’을 연다.



터는 25곳에서 107곳으로 4배 늘어난다. 음악으로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를 실현하는 예술교육센터도 기존 3개소에서 13개소로 확장한다.

‘서울365 거리공연’은 참가 공연팀(200팀→220팀)과 공연횟수(2300회→3750회)를 늘린다. 북촌한옥마을에서 진행되는 ‘한국명소 국악공연’(50회→100회), 시민에게 찾아가는 ‘서울시향 우리동네 음악회’(42회→63회)도 각각 확대 운영된다.

시민이 기증한 악기를 낙원상가장인이 수리한 후 악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교육용으로 제공하는 ‘낙원생활문화지원센터’는 12월 개관한다.

공연 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이달 중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선보인다. 2023~2024년에는 창동 서울아레나, 서남권 대공연장, 서울클래식홀의 문을 연다. 2022년에는 우리 국악의 창작활동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서울국악센터’와 흥대에 뿌리를 둔 인디음악의 제작·유통·마케팅을 도와주는 ‘서울인디 음악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태스크포스 팀 이동연 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2023년 12월 개장하는 서울 아레나에 연간 300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창동에 300개의 음악기업이 유치될 예정이고 공연비로 연간 2000억~250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시는 인재 육성에도 밸 벗고 나선다. 음악 기획·유통·마케팅·저작권 등 음악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뮤직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예술 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269건에서 282건으로 연차별로 확대한다.

LP바, 클럽, 펍 등 서울시내의 음악 명소 50곳을 발굴해 홍보하고 국제 음악 행사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70여개 도시 음악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는 뮤직시티즈컨벤션을 개최하고 세계 최대 월드뮤직 행사인 위매드 유치를 진행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물속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 ‘마이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로봇 전시회에서 로봇 물고기 ‘마이로’가 물속을 헤엄치고 있다.

경기도, 전국 최초 “시내버스 승차벨 도입”

무정차 통과 예방, 하차벨의 반대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정류소 무정차 통과 예방을 위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탑승객의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하차벨’과는 반대로,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

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다.

버스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 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음 도착예정 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승차벨(음성 또는 그래픽)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예산운영에 시민 의견 담는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서울시는 2020년 예산편성과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시민 의견을 담는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19일 2시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를 연다. 정책 고객

인 시민에게 시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는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강동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김현정 기자

석촌고분·송파나루·방이역 일대 개발 ‘시동’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 변경 응암지구 중심 정비안도 수정 가결

잠실 관광특구 배후지역인 서울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과 송파나루역, 5호선 방이역 일대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서 석촌고분, 송파나루, 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도건위는 석촌고분지구 1곳, 송파나루지구 2곳을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간선도로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업무·판매시설의 면적제한을 완화해 중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정비 면적을 기존 10만6000m²에서 10만9800m²로 확대했다.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균형생활 중심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응암지구 중심 정비안도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응암로와 가좌로가 교차하는 응암오거리에 위치한 균형상업지역임에도 2007년 재정비 이후 간선가로변 개발이 저조해 균형생활 중심지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도건위는 공동개발 계획을 완화해 응암지구 중심 일대 개발을 촉진

하도록 했다. 가로변 쌈지형공지 조성 계획을 수립,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응암오거리 머자골목 일부를 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해 건폐율을 완화하고 가로 활성화 기능 중심의 건축물 용도 계획도 마련했다.

한편 시는 이날 중랑구 면목동 1362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인근에는 지하 4~지상 15층, 총 182세대(공공임대 60세대·민간분양 1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반시설 부담이 적은 역세권을 적극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이번 주말 서울광장이 대규모 공론장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안한 정책 오프라인에서 토론 진행

이번 주말 서울광장이 대규모 공론장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20~21일 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한 정책을 오프라인에서 토론하는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서울광장에서 연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의견 중 공감이나 의견이 많았던 주제 5개를 중심으로 오픈라인 공론장을 운영한다. 각 공론장에는 10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다.

토론 주제는 ▲미세먼지 시즌제 ▲서울시민숙의예산 ▲시정 협치 ▲마을과 민주주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놀 권리

다.

행사 첫날인 20일에는 캠핑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서울 속 정책캠핑’이 진행된다. 21일에는 인기 유튜버 3명이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유튜버 열전’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는 제로페이, 청년자치 정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등 서울시 주요 정책을 만나볼 수 있는 정책홍보부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시민 제안이 어떻게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공유한다.

서울시, 종로·청계천 주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서울시는 10월 31일까지 종로·청계천 주변 4.6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일 8개조 60명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인 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를 순회하며 단속 활동을 벌인다.

시는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하면 4만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